

09

버려야 할 관행, 지켜야 할 원칙

뉴스 기사는 저널리즘의 현실을 스스로 말한다. 시민의 신뢰가 추락하는데도 기사의 품질이 제자리걸음 하는 이면에는 잘못된 취재 보도 관행이 공고히 자리 잡고 있다. 시급히 바뀌어야 할 대표적 관행을 짚어보고 올바른 보도 원칙을 제시한다. 이 기획은 저널리즘 품질 향상을 고민하는 '좋은저널리즘연구회' 회원들이 돌아가며 집필한다.

사실과 의견 분리

기사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라



이나연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7월 초, 상산고는 전라북도교육청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를 취재해 보도한 한 주요 일간지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는 한국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자사고 탈락’ 감사 평가 제대로 됐는데…억지 부

상산고등학교 정문에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상산고는 7월 26일 교육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뉴스1



리는 상산고>¹⁾ 기사에선 상산고가 개최한 기자회견이라는 사실(fact)을 다뤘지만, 제목에는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사실’이 없었다. 대신 전라북도교육청 평가는 타당한 반면, 상산고의 주장은 잘못됐다는 언론사의 ‘의견’만 제시했을 뿐이다. 기사의 구성 요소로서 제목은 전체 기사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요약해 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저널리즘 학자들은 전체 기사 대신 제목만 읽는 독자가 많다는 점에서 제목의 정확한 요약 기능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의견만 담은 위와 같은 제목으로 독자들은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

제목에 이은 기사의 첫 단락에는 “과거 상산고에 대한 감사 처분 결과를 재지정 평가에서 이번 한 번만 반영했는데도, ‘중복 적용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트집을 잡고 있다”고 썼다. 상산고의 주장을 ‘트집 잡기’로 폄하했지만, 20여일 뒤 교육부는 이날 상산고가 제기한 이의 중 일부에 대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상산고의 주장이 괜한 트집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 단, 홈페이지 제목과 달리 해당 언론사의 지면에는 <상산고, ‘중복 적용한 부당 평가’ 주장 되풀이>라는 다소 중립적인 제목을 사용했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상호 이해가 대립되는 이슈에 대해 언론사가 한쪽의 주장에 대해 ‘억지 부린다’거나 ‘트집 잡는다’고 평가하는 것은 시민이 언론에 기대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언론, ‘사실과 의견의 분리’ 원칙 지키지 않아

기사 작성의 기본 원칙은 ‘사실과 의견의 분리’다. 실제로, 기자가 되면 제일 먼저 최대한 주관을 배제한 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도록 훈련받는다. 아울러 기자의 역할이란 시민에게 공공 사안에 대해 최대한 정확한 정보, 혹은 사실관계를 알려주는 것이라 배운다. 민주 사회에서 시민이 공공 사안에 대해 건전한 의견을 갖추려면 먼저 그 사안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이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기자의 업무라 여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이 의견이나 관점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보도한다는 믿음은 무너진 지 오래다. 도입 사례에서 보듯 국내 언론 현장에서는 ‘사실과 의견의 분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언론 현장에서 사실의 전달자로서의 기자 역할이 퇴색한 이유는 몇 가지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사실의 객관성을 바라보는 회의적 시각이다. 다시 말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 있느냐에 대한 의심이다. 또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언어로 표현해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심한다. 둘째, 언론의 객관성이란 추구할 수 있는 혹은 언론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직업적 관행에서 도입된 가치일 뿐이라는 시각이다. 예를 들어 터크만은 인용에 대해 기자가 취재한 내용



기사 작성의 기본 원칙은 ‘사실과 의견의 분리’다. 실제로, 기자가 되면 제일 먼저 최대한 주관을 배제한 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도록 훈련받는다. 아울러 기자의 역할이란 시민에게 공공 사안에 대해 최대한 정확한 정보, 혹은 사실관계를 알려주는 것이라 배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이 의견이나 관점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보도한다는 믿음은 무너진 지 오래다. 국내 언론 현장에서는 ‘사실과 의견의 분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고안한 도구일 뿐이라고 설명했다(Gaye Tuchman, 1972). 기자들이 취재원의 발언을 인용할 때, 기자가 동의하는 발언 내용만을 인용한다는 근거에서다. 한국에서는 더 나아가 독재 정권에서 언론이 정치적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실(혹은 사건) 보도에 중점을 두게 됐다는 주장도 있다(남재일, 2008). 아울러 언론사의 입맛에 맞는 사실만을 보도하기에 사실이란 주관을 감추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세 번째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보다는 해석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더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아예 기자의 가치 개입과 도덕적 판단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주창 저널리즘마저 힘을 얻으면서 주관의 배제라는 기사 작성 원칙은 그 힘을 잃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객관성을 둘러싼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저널리즘에서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저널리즘은 그 존재 의미를

않기 때문이다. 기자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아주 기본적으로는 민주 사회에서 시민들이 자치를 위해 알아야 할 많은 사건 혹은 이슈의 현장에 대리인으로 참여해 관찰하고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 대리인이 가장 객관적으로 사실을 대할 때, 시민은 진실에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자가 관찰해야 할 대상을 자신의 관점(주관)에 눈이 멀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의 관점에서만 전달한다면, 시민은 이 대리인의 관찰 결과인 기사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로 하지도 않을 것이다. 저널리즘의 역사에서 ‘사실과 의견의 분리’라는 원칙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도 기사는 사실(시민이 직접 사건 현장에 있더라도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는)만을 전달하고 판단(의견)은 독자에게 맡긴다는 전제에서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나오기 때문이다. 객관주의, 혹은 사실에 대한 일부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부정하는 순간, 언론을 지탱해주는 사실 검증의 가능성은 물론 언론의 기능도 무너진다.

버려야 할 관행, 해외 언론과의 비교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여전히 ‘사실과 의견의 분리’를 저널리즘 가치를 지탱하는 중요 원칙으로 여기고, 기사 작성에서 주관을 벗어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특히 국내 언론에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몇 가지 관행에 주목하고 비판해왔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더딘 편이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비판을 토대로 버려야 할 관행에 대해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도입 사례에서 본 것처럼 사실에 대한 해석을 핑계로 의견을 남발하는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관행 중 하나는 취재원의 발언을 직접 인



7월 24일 조선일보 사회면에 실린 자사고 기사 <출처 - 조선일보 홈페이지>

용하면서 기자의 주관에 담긴 서술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는 2019년 7월 24일자 사회면에 <자사고 줄취소 위기... 들쭉이는 강남 8학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부동산 관계자)는 수화기 너머 상대방에게 ‘대청중학교에 가려면 무조건 ○○아파트와 ○○아파트로 가야 한다’며 ‘서울대에서 동창회를 하면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출신이 150명씩은 될 것’이라고 열변을 토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열변을 토했다”는 것은 기자의 생각일 뿐이다. 이 때문에 저널리즘 교과서에서는 직접 인용의 서술어의 경우, 기자가 중립적임을 나타내는 ‘말했다’와 ‘덧붙였다’는 표현 이외의 ‘주장했다, 요구했다, 의견을 피력했다, 강조했다, 머뭇거렸다, 암시했다, 선언했다, 울먹였다’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Rich, 2005). 그러나 좋은저널리즘연구회에서 2016년 수집한 국내 10대 일간지 1면 기사 694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 일간지의 경우 기사당 평균 1.4개의 주관적 술어를 사용했으며, 하나의 기사에 12개의 주관적 술어를 사용한 신문사도 있었다. 이에 비해 뉴욕타임스와 더타임스, 그리고 아사히신문의 주관적 술어 사용은 훨씬 낮은 빈도를 보였다.^[표 1] 기사에서 기자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또 다른 사례로는

[표 1] 기사에 사용된 주관적 술어의 평균 개수 및 최솟값·최댓값 비교

(단위: 개)

	기사당	최솟값	최댓값
국내 일간지(694)	1.40	0	12
뉴욕타임스(72)	1.22	0	13
더타임스(54)	0.72	0	4
아사히신문(72)	0.85	0	6
전체(892)	1.30	0	6

[표 2] 기사에 사용된 무주체 피동형 문장의 평균 개수 및 최솟값·최댓값 비교

(단위: 개)

	기사당	최솟값	최댓값
국내 일간지(694)	1.19	0	8
뉴욕타임스(72)	0	0	0
더타임스(54)	0	0	0
아사히신문(72)	0.82	0	5
전체(892)	1.00	0	8

주관을 드러내는 부사의 사용을 들 수 있다. 좋은저널리즘연구회의 같은 연구에서는 국내 일간지의 제목 중 197건(28.4%)에서 부사를 사용했지만, 뉴욕타임스에서는 71건 중 단 9건(12.5%)에서만 부사를 포함했다. 두 번째, 국내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부정적 관행은 ‘무주체 피동형 문장의 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다(박재영·이완수, 2007). 무주체 피동형 문장이란 문장의 주어 없이 ‘~로 알려졌다’, ‘~전망된다’ 등으로 끝나는 문장을 말한다. 무주체 피동형 문장은 다양한 이유에서 사용되지만 기자의 생각을 마치 다른 많은 사람들의 것처럼 포장할 때 등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좋은저널리즘연구회에서 무주체 피동형 문장의 사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 국내 신문사는 기사당 평균 1.19개를 사용한 반면, 뉴욕타임스와 더타임스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마지막 부정적 관행은 주관을 객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취재원의 인용이다. 이러한 유형은 크게 1)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취재원을 등장시키거나 2) 기자의 비판적 시각을 익명 취재원의 발언으로 기사화하는 유형 등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국내 연구를 통해 특정 언론사에 주로 등장하는 취재

“미국의 기사 작성 교과서에서도 부정적 내용의 의견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인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익명으로 된 부정적 직접 인용구의 사용은 빈번한 편이다.”

[표 3] 기사에 사용된 익명으로 된 부정적 문장의 평균 개수 및 최솟값·최댓값 비교

(단위: 개)

	기사당	최솟값	최댓값
국내 일간지(694)	0.32	0	10
뉴욕타임스(72)	0	0	0
더타임스(54)	0.15	0	3
아사히신문(72)	0.10	0	6
전체(892)	0.27	0	10

원을 확인하거나 혹은 동일한 취재원의 발언 중 언론사의 필요에 맞춰 인용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또한 해외 언론과 크게 차별되는 관행 중 하나는 특정 대상에 대한 비판을 익명의 취재원이 말한 것처럼 보도하는 관행이다. 기사에 익명으로 된 의견을 쓸 경우, 필자의 주관적 견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2007년 한겨레가 ‘취재보도준칙’을 발표하고 ‘의견이나 주장, 추측 등을 수집해 보도할 때에는 실명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 바 있다(박재영·이완수, 2007). 익명의 취재원이 기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가공의 인물인지 독자로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사 작성 교과서에서도 부정적 내용의 의견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인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익명으로 된 부정적 직접 인용구의 사용은 빈번한 편이다. 좋은저널리즘연구회가 2016년 수집한 기사 분석에서도 국내 일간지에서는 기사당 평균 0.32개의 부정적 인용구를 포함했으나, 뉴욕타임스에서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표 3]

미국의 빌 코바치(Bill Kovach)와 톰 로젠스틸(Tom Rosenstiel)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The elements of Journalism)》에서 유명 TV 뉴스캐스터였던 캐롤 마린(Carol Marin)의 말을 인용해 기자는 자신의 관점을 극복하려는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자를 테이블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을 때 토론의 참여자가 되어 자신의 관점을 피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토론 테이블에서 한걸음 떨어져 토론의 전체 모습을 보는 사람으로 비유하며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관점을 극복하도록 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p.136). 언론의 정파성을 의심받는 시대, ‘기사로부터 한걸음 떨어지라(Stay out of the story)’는 기사 작성의 기본 원칙을 되새겨볼 직하다. 📖

참고문헌

- 남재일, <한국 객관주의 관행의 문화적 특수성: 경찰기자 취재관행의 구조적 성격>, 《언론과학연구》 9권 3호, 233-270, 2008.
- 박재영·이완수, <인용(quotation)과 취재원 적시(attribution)에 대한 한미 신문비교>, 《한국언론학보》 51권6호, 439-468, 2007.
- Carole Rich, 《Writing and Reporting News》, 5th edition, Belmont: Wadsworth, 2005.
- Kovach, B., & Rosenstiel, T., 《The elements of journalism》, 3rd edition, New York: Crown, 2007.
- Tuchman, G., <Objectivity as strategic ritual: An examination of newsmen's notions of objectiv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7(4), 660-679, 1972.